

지방의회 院구성 파행 왜 끊이지 않나

# ‘나눠먹기식’ 선출 담합·줄서기 조장

### 막강한 권한 비해 선출방식 비합리적 ‘교황식’ 무기명 투표 ‘파벌싸움’ 불러

지방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을 놓고 파문이 일고 있는 것은 막강한 권한에 비해 선출 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이른바 ‘교황식 선출 방식’으로 인해 담합이나 이합집산에 의한 나눠먹기식 선출이 가능해 의원들간에 파벌이 생기고 이에 따른 사람 빼기가와 배신 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막강한 권한 가진 의장단**=지방의회는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예산에 심의, 의결하고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도 일정부분 참여하고 있다.

의회 운영을 주도하는 의장단은 이같은 의회의 권한을 대표한다. 의장은 공식적인 권한만 무려 84가지에 달하며 이날 1일부터 의회 기능직과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 인사권한이 집행부에서 사무처로 이관돼 인사권이 더욱 막강해졌다.

의장단 구성은 광역의회의 경우 의장 1명, 부의장 2명, 기초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둘 수 있게 돼 있다.

의장단 외에 광역의회의 경우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5~6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운영위원회·교육사회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전남도의회는 운영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경제관광문화위원회·건설소방위원회·교육사회위원회·농수산환경위원회 등을 각각 두고 있다.

또 기초의회도 운영위원회·기획총무위·사회도시위 등 의원 규모에 따라 3~4개의 상임위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을 대표하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각종 개발정보에도 쉽게 접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각종 이익이 걸린 사업에 개입해 ‘떡고물’을 만질 수 있다. 자신의 지역구를 위한 선심성 사업을 펼칠 수 있어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의원들간에 거액의 돈이 오가 일부 의원들이 사법처리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04년 7월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도 금품살포와 담합설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교황식 선출 방식 문제점**=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은 이른바 ‘교황식’으로 뽑는다.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무기명 인기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다. 물론 광주시의회는 경우 정견발표를



강박원 의장 선출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광주시의회 소수파 의원들이 12일 오후 4시 열린 개원식에서 의원 선서를 마치고자 항의의 뜻으로 개원식장인 본회의장을 빠져 나오고 있다. /위직경기자 jwji@kwangju.co.kr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전체 의원 증선호 이름 밑에다 가표시를 하는 것으로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교황식 선출 방식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때문에 당 또는 인물 중심으로 파벌이 나타나고 그 파벌끼리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사전에 내부적으로 정하고 본회의장에서는 약속이나 한 듯이 같은 투표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명이 정원인 광주시의회는 경단 한 파벌이 10명의 의원만 확보하면 의장 1명, 부의장 2명, 상임위원장 4명, 예결위원장 1명 등 모두 8명의 의원 대표를 의도대로 선출할 수 있

다. 의회 경력이 있고 특정 분야에 전문가로 객관적으로는 특정 상임위원장에 유력해 보여도 의장 후보를 잘못 선택한 것만으로 모든 대표직에서 제외된다. 소수와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는 것이다. 때문에 10명을 확보하기 위해 의장 후보들은 혈안이 되고 의원 각자는 자신이 원하는 자리를 요구하며 줄서기를 시도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배신과 빼가기가 횡행하고 나아가 파벌간 감정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합리적·이성적 투표는 사라지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의회 어떤 자리?  
보좌진만 모두 5명  
관공비 年 5천만원

의장에 대한 예우는 단재정에 준해 이뤄진다. 광주시의회 의장의 경우 별도의 방(56평)과 함께 의전용 차량으로 2700cc급 오피러스가 제공되며 5급 비서실장과 직원 3명, 운전기사까지 모두 5명의 보좌를 받을 수 있다.

또 직무수행을 위한 활동비로 월 400만원의 공식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며 각종 행사에서 시장과 동격의 대우를 받는다.

부의장은 월 공식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받고 별도의 방(36평)에 여비서를 두고 있으며, 상임위원장은 월 공식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받는다.

의원 신분은 더해지는 이같은 각종 혜택과 더불어 의회의 대표로서 언론과 시민사회에 대한 노출의 빈도도 늘어 정치인으로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장점도 있다.

# “의장 선거때 거액 제시 받았다”

윤난실 前시의원이 말하는 의정생활

“지난 4대 의장 선거 때 의원들 간 세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한 동료의원이 거액을 제시하며 지지를 부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언지하에 거절했지요”

지난달 말로 4대 광주시의원 임기를 마치고 평범한 가정주부로 돌아간 윤난실 전 광주시의회는 11일 벌어진 광주시의회 의장단 선출 파문이 남의 일 같지가 않다. 그는 의장단 선출 파문의 원인을 의원들이 대표권을 ‘권력’으로 생각하는 데 있다고 풀이했다.

윤 전 의원은 “시의원이 법적으로는 시민의 ‘대표’기관이지만 ‘대리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대표’라고 하면 ‘권력’을 떠올리지만 ‘대리인’이라고 하면 ‘직분’과 ‘의무’가 생각나고 그래야 직무유기와 권한남용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회를 꾸려준다니니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라는 등 회유를 하고 주유권 등 선물 공세를 할 때 물리친 일 등을 기억해 냈다. 일부 경우는 되돌려주면서 오히려 미안할 때도 있었다고 한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민원도 많지 않다. 이에 대해 윤 전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 아니어서 인사 청탁 등 악성 민원은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오십대 실직자가 시청의 일용직 자리를 부탁하거나 어느 청년은 도시철도공사 직원 모집에 추천을 요청하는가 하면 모기업체 사장이 회사에 대한 배려를 부탁하는 등 청탁이 들어오는 경우



“대표권을 ‘권력’ 착각  
院구성 파문 되풀이”

윤 전 의원은 지난 2002년 비례대표로 광주시의회에 입성, 4년 동안 시민과 노동자, 장애인 등에서 많은 일을 해온 인물로 꼽힌다. 민노당 소속인 그에게도 선물과 청탁은 끊이지 않았다.

윤 전 의원은 어린 시절 이웃들에 선풍 등 선물을 신부름으로 전할 때의 즐거운 마음을 떠올리며 마을 편하게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선물 안 받는 것이 절대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이 주신 책은 잘 받았고 보육조례제정 운동의 실무를 맡았던 선생님이 주신 장갑은 지금도 잘 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윤 전 의원은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백지한 장보다 가까워 언제나 망설이고 조심한다.

그리고 그는 교육청 모 간부가 기어이 내놓고 가는 상품권 봉투를 뒤통수에 우악스럽게 던져버린 일, 한 공무원이 우편으로 보낸 상품권을 다시 우편으로 돌려보낸 일, 택시업계의 인사가 후원

도 있다”고 말한 뒤 “추천과 청탁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섬세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추천이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청탁 아니면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단호히 거절했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에게는 또 청탁과 관련, 가슴을 쓸어내릴만한 일이 있었다. 그는 “대리운전을 하며 어렵게 자식을 키우는 사촌동생이 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도 밤을 새서 일하는 자식 때문에 마을 아파하던 작은 어머니께서 어떻게 기아자동차 취직 부탁을 한 적이 있었다”며 “그런 힘이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기억을 되살렸다. 그 뒤 얼마 되지 않아 전국을 뒤 흔든 기아차 채용비리 사건이 터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

# “하자 없다” 광주시의회 선출 법적효력 논란 “원인 무효”

광주시의회 다수와 의원들이 11일 밤 반쪽 본회의에서 의장으로 강박원 의원을 선출한 것에 대해 다수파와 소수파 의원들 간 법적 효력 논란이 거세다.

다수와 의원들은 다각도로 법률적 검토를 실시한 결과, 강 의장 선출이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주장하는 반면, 소수파 의원들은 이날 의장 선출은 불법이어서 ‘원인무효’라는 주장하고 있다.

이날 의장 선출의 쟁점은 무리를 헤쳐서라도 11일에 의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점과 김동식 의원이 가졌던 의장직무대행 권한을 강 의원이 가져간 것이 합법적일 수 있는냐는 점이다.

◇**11일 선출 논란**=다수파 의원들은 11일 오후 이날 의장 선출을 밀어붙여야 하는 문제로 고심했

으나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8조의 ‘의장단 선거는 의원 총선 직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한다’는 강제 규정을 들어 강행을 선택했다. 이번 본회의 집회공고가 11일 하루로 공고됨에 따라 이날 의장단 선출 안전을 처리하지 못하면 다시 본회의의 공고내도 일주일 후에나 의장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다수파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소수파는 8조 규정의 ‘최초 집회일’이란 ‘처음 소집되는 임시회 회기 중의 첫 의사 일정’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의사진행 중 정회로 안전을 당일 처리하지 못한다면 다음 날로 자동 연기된다는 것인데 자의적으로 ‘첫날’로만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의장직무대행 논란**=다수파는 원래는 최연장

자인 강박원 의원이 의장직무대행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형편상 잠시 권한을 김동식 의원에게 위임한 것인데 김 의원이 고의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지 않는 등 의사진행을 해대하자 원래의 권한을 다시 되찾은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 즉 강 의원이 직무대행권자인 만큼 위임을 했더라도 언제라도 본인이 원하면 직무권한대행을 다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수파는 김 의원이 직무대행으로서 사회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상정된 안전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 의원 측에서 직무대행 권한을 일방적으로 가져간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소비자에게 드리는 코카-콜라의 약속

한국 코카-콜라 보틀링(주)에 변함없는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소비자 및 고객 여러분께 최근 발생한 당사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협박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켜온 한국 코카-콜라 보틀링(주)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게 당사 제품의 안전에 대해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1. 소비자 안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당사의 방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발적인 제품 리콜을 실시합니다.
  - 해당 지역: 광주, 화순, 담양 지역 ●해당 제품: 한국 코카-콜라 보틀링(주)에서 제조한 코카-콜라, 코카-콜라 라이트, 코카-콜라 제로 모든 PET 제품(390ml, 500ml, 600ml, 1.25L, 1.5L, 1.8L)
2. 각 매장이나 가정에 보관된 제품 중 용기 외형이 변형되었거나 용량이 부족한 제품, 용기 뚜껑이 제대로 닫혀있지 않은 제품 등이 있다면 절대 드시지 마시고, 가까운 경찰서 혹은 코카-콜라 소비자상담실 080-024-5999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지역에서 제품을 구매하신 소비자는 가까운 매장에서 잔액 환불 받으실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불만사항이 있으시다면 코카-콜라 소비자 상담실 080-024-5999로 문의해 주십시오. 성실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 코카-콜라 보틀링(주)은 이번 리콜 조치를 통해 약 100만병의 해당 제품을 회수하여 전량 폐기 처리할 예정이며, 제품 안전에 관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리콜 조치는 계속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소비자 및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한국 코카-콜라 보틀링(주) 임직원일동

